"공공기관 2차 이전, 인구감소율·균형지표 반영해야"

광주·전남 '공공기관 총량제 적용' 정부에 건의 호남권 지자체 영향력 높은 공공기관 유치에 힘 모아야 정부 가이드라인 작성 경제력 반영 이전지 선정 주장도

국가균형발전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 정부가 최근 5 년간 인구감소율, 균형발전위원회 균형 지표, 지방소멸위험지역 등의 지수를 반 영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높다.

공공기관의 전국 분포도, 기존 혁신도 시의 성과 등도 포함시켜 공공기관 2차 이 전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.

광주·전남·전북 등 호남권 지자체들 역 시 지역 발전에 있어서 영향력이 높은 공 공기관들이 호남권에 우선 배치될 수 있도 록 힘을 모으고, 향후 각 지역의 여건, 특 징 등을 감안해 배치하는 수준 높은 전략 을 구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29일 광주시,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해 기 존 이전 대책을 수정·보완해 유치 대상 기 관을 재검토하고 있다.

국가균형발전법 개정으로 충남에 12번 째 새로운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지자체 들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 로 예상돼 광주시와 전남도가 유치 전략 구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우선 광주·전남은 '공공기관 총량제 적 용'을 정부에 건의중이다.

공공기관 1차 이전에 의해 광주·전남 이 공동조성한 빛가람혁신도시 내 한국 전력 등 16곳이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호남권에는 정부 공공기관 362개 중 고 작 29개(8.0%)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

이에 반해 충청권 84곳(23.2%), 영남 권 74곳(20.4%) 등은 절대적인 우세를 보

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 가 공공기관 이전 가이드라인을 작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. 인구 감소지역, 3개년 재정자립도 평균 등 균형 발전지표, 경제력 분석 등을 반영해 '공공 기관 이전 우선지역'을 선정해야 한다는

호남권 인구는 1970년 697만명에서 2020년 571만명으로 지난 50년간 18.0%(125만명)가 감소했으며, 2070 년에는 401만명에 이를 전망으로 2020 년 대비 향후 50년간 29.8%(171만명)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

여기에 균형발전 핵심지표인 3개년 재 정자립도 평균 역시 광주가 53.6%, 전남 이 30.8%로, 전국 평균(55.0%)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.

120여개 규모의 공공기관 2차 이전에 금융기관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 운데 광주·전남은 지역경제에 영향력이 높 고, 기존 국책사업, 대규모 프로젝트 등과 연관성이 높은 공공기관들을 선별하는 절 차에 착수했다.

당초 광주는 35개, 전남 24개 기관을 유 치할 방침을 세웠지만, 대상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고심중이다. 광주시는 우선 문화예 술, 인공지능, 에너지융복합, 전남은 농생 명, 에너지, 정보통신, 해양수산기업 등에 국책은행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.

김현철 광주전남연구원 연구기획부장 은 "정부가 쇠락한 호남권의 여건을 감 안,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에 입각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가이드라인을 작성하 도록 광주·전남이 힘을 모아야 한다"며 "가이드라인이 나온 뒤에 이전 방식, 지역 특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민하면서 광 주•전남이 함께 논의하는 방향이 나을 듯 하다"고 말했다.

/윤현석 기자 chadol@kwangju.co.kr

야산·농경지·들판…소유하고픈 인간의 욕망



(322) 부동산



게인즈버러 작 '앤드루스 부부'

대폭 올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온 나 라가 술렁이고 있다.

의 일이라 관심이 덜하지만 전문가들 은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구조 적 문제가 집약된 것으로 파악하고 아예 '부동산 사태'로 접근하는 태세

과문하기도 해서 먼발치서 보기에 부동산 문제는 시장기능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해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인위 적으로 억누르다보니 해법은 멀어져가 는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든다.

풍요를 추구하고 물질적 여유를 누 리고 싶어 하는 인간의 욕망은 그림에 서도 드러난다.

영국 출신의 토마스 게인즈버러 (1727~1788)의 '앤드루스 부부' (1750년대 작)가 바로 그런 작품이다. 이 그림은 어느 부유한 귀족부부의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다.

이 그림은 기품 있는 초상화를 그리

최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는 화가로 유명했던 게인즈버러가 고 향 친구인 로버트 앤드루와 부인 프란 시스 카터의 부탁으로 완성한 결혼 기 우리 같은 서민들에겐 보유세가 남 넘 초상화로 초상화 못지않게 화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풍경 묘사 가 더 핵심이다.

> 초상화의 배경에 그려진 풍경을 보 면 야산과 농경지, 들판이 드넓게 펼쳐 져 있다.

> 추수가 끝난 후의 깨끗한 밭은 가지 런히 정돈되어 있고 멀리 뒤편으로 울 타리를 친후 그 안에 방목하고 있는 양 들도 보인다.

> 앤드루 부부는 최신식 로코코풍의 화려한 옷을 입고 한껏 멋을 부리고 부 자가 아니면 지닐 수 없는 장총 등의 소 품을 통해 부유한 지주 계급임을 과시 한다. 화폭 안에 펼쳐진 광대한 사유지 도 그런 맥락이다.

> 앤드루 부부는 이 그림을 볼 때마 다 자신들의 모습 뿐 아니라 그림의 대상 즉,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일 확인하는 기쁨을 만끽했을 것

〈광주시립미술관학예관·미술사박사〉

문대통령, 박지원에 임명장…손자에 '신뢰' 꽃다발 건네

靑 "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 없다"

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박 지원 국정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 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"막혀있고 멈춰 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"며 "두 분은 역사적 소명을 잘 감당할 것"이라고 격려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.

문 대통령은 박 원장에 대해서는 "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주역 이자, 가장 오랜 경험과 풍부한 경륜 갖춘 분"이라고, 이 장관에 대해서는 "추진력이 대단한 분"이라고 평가했다.

이에 박 원장은 "남북관계의 물꼬를 트 고, 국정원의 흑역사를 청산하는 개혁으로 보답하겠다"며 "문 대통령의 재임 중에 평 화의 숨결만큼은 반드시 실감하도록 전력 을 다하겠다"고 밝혔다.

문 대통령은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도 임명장을 주면서 "경찰 역사상 가장 중 요한 대전환기에 수장을 맡았다"며 "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수사체계 개편과 정에서 국가가 가진 수사 역량의 총량에 조금도 훼손이 있어선 안된다. 오히려 발 전시켜야 한다"고 당부했다.

한편 청와대는 이날 박지원 국가정보원 장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 한 대북송금 이면 합의 문건에 대해 '존재 하지 않는다'고 전면 부인했다.

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



나 "국정원,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 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 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"고 말했다.

이 관계자는 "관계 기관에는 청와대도

포함된다"며 만약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 ·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"라고 덧 붙였다. 미래통합당은 지난 27일 국회 정 보위원회의 박지원 국정원장 인사청문회 에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30억

달러 규모의 대북 지원을 위한 남북 간 이 면 합의가 있었고, 이에 대한 증거라면서 '4·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'라는 문건을 공 개한 바 있다.

/임동욱 선임기자 tuim@kwangju.co.kr

민주, 대선 100일전 후보 선출 검토

현행 180일은 너무 길어

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180일 전으로 규정된 대선 후보 선출 시기를 '선거 전 100일'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.

너무 빨리 대권주자가 결정돼 야권의 공격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복안으로 풀 이된다.

당 전당대회 준비위 핵심관계자는 29 일 "지금처럼 6개월 전에 선출하게 되면 우리 당 후보가 공격당할 수 있는 기간이

늘어나는 문제가 있다"며 "후보 선출 기 간을 이전보다 줄이는 것을 검토할 예 정"이라고 말했다.

전준위는 당헌·당규 분과 차원에서 논 의해 의견이 모이면 8·29 전당대회 때 채 택할 당한・당규 개정안에 대선 후보 선출 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포함시킬 예정

이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2022년 3 월 대선을 기준으로 2021년 9월이 아닌 11월 말에 후보를 선출하게 된다.

/오광록 기자 kroh@kwangju.co.kr

